

## 광주, 동구·서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되나

### 뉴스 초점

광주시가 정부에서 광주 모든 자치구에 지정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중 동·서구 등 일부 자치구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또 어느 지역보다 부동산 집체가 심각한 자치구로 꼽히는 북구의 경우 특정지역에서 일시적인 재건축 호재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폭등한 점에 주목하고, 해제 건의 여부를 고민 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 비율을 축소하는 등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광주 일부 지역은 부동산 거래가 침체한데도 지정이 지속돼 일부 시민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다만 일부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져 주택 실수요 시민이 필요할 때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반면 과도한

시, 정부에 해제 요청키로 ... 매매가 상승 북구도 건의 검토 중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 투기 악용 우려 ... "신중해야" 지적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 증식이냐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해제 여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20일 광주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주택 가격, 거래량,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되고, 전매제한, 청약자격, 다주택자의 과세 등이 강화되는 등의 조치가 따른다.

시는 이달까지 최근 3개월간 지정 기준을 검토해 해제 요건을 충족한 자치구에 대해선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며, 국토부는 오는 6월 18일까지 지정 여부를 검토해 예정이다.

국토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공통요건과 선택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될 때 결정하는데, 공통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다. 선택요건은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이다.

광주 5개 구는 지난해 12월 공통요건 기준인 1.3배를 모두 충족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동구 1.38배, 서구 1.38배, 남구 1.64배, 북구 1.41배, 광산구 1.5배였다. 광주시는 당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남구와 광산구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며 모든 구를 지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던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현재까지 사업 차질을 빚고 있다.

이후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지정 기준을 심의하도록 관련법이 바뀌면서, 광주시는 6개월째인 오는 6월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일단 지난 2~4월 3개월 기준 정량적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만 따졌

을 때 동구 0.58배, 서구 0.72배, 남구 1.56배, 북구 1.36배, 광산구 1.70배로, 동구와 서구는 지정 기준인 1.3배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시는 5월 한달간 상승률이 남아있긴 하지만, 광주지역에 별다른 주택가격 인상요인이 없다는 점에서 현 정량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또 특정지역의 일시적인 아파트 매매가 상승으로 정량적 기준을 초과한 북구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구 운암 주공 3단지 전 용 18평형대 기준 7억~8억원대, 12평형대 기준 6억원 대의 높은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다.

시는 정부의 최근 정책 기조가 부동산 완화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번 해제 건의도 별다른 이점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41년 전 그 날처럼 ... 5·18 '민주기사의 날' 차량 행렬



5·18구속부상자회와 전국 민주택시노동조합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 무등경기장(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주변에서 '민주기사의 날 41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41년 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금남로를 가득 메우고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표현한 차량 행렬 시위를 재현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여수서 일가족 10명 확진 ... 학생 많아 교내 감염 우려

여수에서 이틀새 일가족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확진자에는 초중고교 학생 6명이 포함돼 교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광주시내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19일 15명, 20일 오후 6시 현재 8명이 신규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2664명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8명 가운데 4명은 광산구 교회·서구 유흥업소·지인 모임 등을 고리로 감염됐으며, 다른 4명의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

남에서는 여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전남에서는 지난 19일 7명, 20일(오후 6시 현재) 10명이 확진됐다. 이틀간 발생한 17명의 신규 확진자 중 10명은 여수에서 나왔다. 이들은 모두 지난 19일 확진된 전남 1342번(60대)의 딸, 사위, 손자 등 가족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이날 손자들이 다니는 초·중·고교 등 5곳을 대상으로 2000여명에 대한 출장 검사를 벌였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교들은 온라인 수업

으로 전환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다"며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 30년 숙원 '전남권 의대 설립' 문재인 정권서도 해결 못하나

### 전남도, 오늘 목포서 토론회

전남의 30년 숙원으로 꼽히는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문재인정권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 의료 강화·지역 의사제 도입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10년간 4000명 추가)' 방안을 발표하자 2개월 만인 지난 9월, 의사단체 반발에 밀려 원점 재검토 선언을 한 뒤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 4일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한의사회 등 의사단체의 절박한 반발(휴진 등)에 무릎 꿇고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회와 협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합의문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회가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지역 의사제 도입,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눈앞으로 다가왔던 전남권 의대 설립 사업이 다시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의정협의체가 열렸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단체 반대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원익 의원(목포·보건복지위)은 "의정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안건으로 다루려고 하면 의사협회에서 반반이 반대해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원점 재검토 합의' 당시, 당의 반대에도 정부가 '코로나 19 이후 논의한다'고 합의한 게 발목을 잡는 것 같다"고 했다.

전남에서는 지난 1990년 목포상공회의소가 '목포대 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 이래 줄기찬 유지 운동이 벌어졌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의대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밝혔으나 두 지도자 모두 집권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전남도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정 논의와 별개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설립·운영 방안 등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목포시, 순천시, 목포대, 순천대와 함께 의대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21일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개최되는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도민토론회'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전남은 고령자와 도서지역이 많고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전남권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전남은 또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라고 지적한 뒤 "인근 광주지역 의대에서 의사를 양성한다고 해도 졸업 후 수도권이나 광주에서 대다수가 근무해 전남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전남권 의대 설립에 힘을 실었다.

이흥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기획운영실장은 "전남도 공공의료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발표문에서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의사 인력 공급 대책의 핵심"이라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한 필요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The New S-Class

Trust in the Best.

완전히 새로워진 S-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성 서비스센터 (042)376-2557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S400 4M (배기량:2925,공용승장2510,차량번호), 복합연비:11.4(도심:9.9, 고속도로:14.0)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70  
\*S580 4M (배기량:3982,공용승장2620,차량번호), 복합연비:7.4(도심:6.8, 고속도로:9.9) 5등급, 복합CO2 배출량: 277  
\*본 센터는 공공의료기관(메리디언)으로 선정, 공인 병원, 차량 적재 및 정비 정비 등에 따라 광우면 면허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여의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